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자이니치(재일 코리언)의 음악적 정체성 탐구를 다룬 다큐 영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이하 아리랑)가 ‘DMZ 다큐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영화제가 열리는 파주로 향했다. 오사가 민족박물관 소속 일본인 음악학자와 자이니치 인류학자가 공동 제작한 이 영화는 지난 5월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주최로 광주에서 한국 내 첫 상영회를 가진 바 있다. 영화제에서 함께 상영된 다른 자이니치 관련 다큐 영화 몇 편도 감상하고, ‘아리랑’ 제작자들과 재회의 기쁨도 나눴다. 광주에서의 첫 만남 이후 서너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좀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느낌이었다.

흔히 ‘재일동포’라고 불려 왔던 자이

귀국선과 귀국열차, 남겨진 이들의 노래

니치는 일제강점기에 여러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가 살다가 해방 이후 귀국선에 오르지 못한 이들과 그들의 후손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한국에서 종종 ‘민족적 동질성’의 요구 아래 변조되어 왔다. ‘아리랑’은 음악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영화다. 제목의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민족주의적 선입견을 줄 수 있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사뭇 다른 색깔을 드러낸다.

영화 속 음악가들은 모두 일본에서 태어난 자이니치 2세와 3세대들이다.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 안성민은 즉흥적 일본어로 아니리 사설을 늘어놓고 종종 일본어 창까지 시도한다. 조충런 계열 ‘금강산 가극단’의 가야금 주자는 북한 유학을 갔다가 ‘기초가 안 돼 있다’고 지적받은 기억을 씁쓸하게 새기며 “물 건너 왔으니 음악도 달라지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한때 오페라를 전공했던 싱어송라이터 이정미는 ‘고향’에 대한 실존적 깨달음을 청중에게 전하며 일본의 하층민과 자이니치가 모여 살던 도쿄 외곽의 빈민촌, 짧은 시절 내내 벗어나고 싶었던 ‘그곳이 또한 내 고향’이라고 노래한다. 이정미에게 ‘아리랑 고개’는 현해탄이

며, 민요 ‘아리랑’은 자신의 조부모와 부모가 일본에 건너와 정착해 살았던 그 ‘고향’으로 향하는 ‘케세이센’(京成線) 열차에서 부르는 노래다.

요컨대 자이니치에게 ‘민족’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한 인생행로를 포기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다움, 곧 내 정체성의 뿌리를 속이고 싶지 않다는 전부 인권적 선언이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민족’이 집단화와 동일성의 논리라면, 자이니치에게 ‘민족’은 개별화와 차이, 그리고 타자의 논리인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에 의해 단순히 ‘민족 수난의 상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그 고난의 역사를 초래한 ‘국가’라는 이름의 주권 권력들에게 요구할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속류의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시기에, 음악과 예술의 영역에서나마 경계(境界)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 초연되고 있는 국립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1945’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만주 일대에

이주하여 살았던 조선인들이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아 귀국열차를 기다리던 상황을 그린다. 이들 속에 일본군 위안부였던 조선인 분이와 일본인 미즈코가 있다. 2년 전 배상식 극본에 국립극단의 연극으로 초연된 이 작품은 예기치 않은 시각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인 자신의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할머니가 된 그들을 뒤늦게 ‘민족수난의 상징’으로 모시기 이전,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가진 분이와 미즈코를 위해 우리는 귀국 열차의 자리를 내줄 수 있었을까?

오페라로 초연된 ‘1945’에서 작곡가 최우정은 그간 한국의 ‘오페라’라는 ‘제도적 음악’의 열차에 동승할 수 없었던 노래들, 민요와 동요, 일본군 풍가와 심지어 유행가 선율까지, 그 시절 고난을 겪던 민초들의 노랫소리에 저마다의 몫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대본에서 음악 그리고 연출에 이르기까지 한국 창작 오페라의 중요한 성취를 이룬 이 작품이 머지않아 광주에서도 공연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는 경계의 사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에 대한 대항적 상상력의 발원지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에.

社說

과열 경쟁 ‘불법 당원 모집’ 철저히 가려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전수조사(全數調査)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당원 부정 모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광주 광산 갑·을 지역구의 불·탈법 사례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권리당원 선거 인단에 대한 민주당의 전수조사 1차 대상은 한 주소자에 네 명 이상의 당원이 가입돼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전국의 4만 1000명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각 시도 당에 당원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경선에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의 표심이 경선 결과를 판가름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모집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그

과정에서 불·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광주 광산 갑·을 지역구에서는 갑은 주소에 7~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주소가 임의로 변경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명의 지역 정치인이 필적이 똑같은 권리당원 입당원서 수십 장을 제출하기도 했고, 상당수의 당원은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유령 신장자’였다.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광산 갑·을 지역구처럼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실제로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면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 모집된 당원들은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중앙당 조사에서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 광주시당은 전체 당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철저한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깝스로 합의는 했지만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나주 고흥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최근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올 1월 거버넌스가 구성된 지 9개월 만이다. 거버넌스는 SRF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구성된 바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30만㎡ 이상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점을 감안해 소각장 대신 2700억 원이 투입돼 혁신도시에 지어졌다.

이번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시험 가동을 2개월간 진행한 뒤 30일간 분가동을 실시기로 했고,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기간·시기·시점·항목 등을 결정하고

최종 보고서를 가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가 주관해 주민투표 70%의 공론조사 30%로 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 제시와 함께 SRF 사용 방식과 조건부 LNG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산 넘어 산’으로 이제 ‘천 리 길을 향해 막 첫걸음을 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발전소 폐쇄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과 부담 주체, 지역민들의 요금 인상 수준 등을 1년 안에 부속 합의서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속 합의서 작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기본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논의하면서 때로는 한 발짝씩 양보하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이채열
변호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최근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그는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죄인이 돼 쫓기듯 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큰 한숨을 지었다.

필자 역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자주 듣고 있어 방송 내용이 특별하게 다가왔다.

전통적인 형사법 체계에서의 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법 절차 내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형사 절차의 목표에 가려져 증거방법 내지 증거 획득의 객체로 취급되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의 문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행해졌고 그 일환으로 새로운 제도들과 법안이 신설되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제도를 살펴보면, 수사 절차에서는 고소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사유나 이유 등에 대한 통지 청구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항고와 재정신청 그리고 헌법 소원 등을 들 수 있다. 공소 제기 후 공판 절차로 넘어오면, 피해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증언 거부권을 갖는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형소법 제294조의 2),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형소법 제294조의 4)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특별법(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 절차를 두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위를 아동 학대 사건에까지 확장한 바 있다. 필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곤 한다.

주요 선진국의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은 사법 당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적 역할 수행이 특징적이며, 이로 인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형사 사법 기관은 관련 민간 단체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다자간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다.

향후 피해자 보호의 입법 및 정책 방향은 주요 선진국의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좀 더 폭 넓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우리 지역에서 이른바 ‘계부의 여중생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계부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가해자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그 사건이 광주로 이관되는 등 수사가 늦춰지면 서 싸울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 고



이천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국립공원은 생태계의 보전·이용·관광 측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최고의 제도이다.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육지와 해양이 만나는 우리나라 대표 해양보호 구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생태관광 체험과 생태 탐방 프로그램 등 국민과 지역 사회에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81년 12월 23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학술적 엄정보호구역(Ia)으로 칠발도가 등재된,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면적(총 2266㎢, 육상 291㎢, 해상 1975㎢)의 해상 국립공원

바다, 섬, 사람을 연결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으로, 각종 희귀 생물의 터전이자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로 해마다 많은 섬 방문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도서 지역 염소포획 및 식생 복원, 해양 쓰레기 수거 등 자연 환경 보전과 야영장·탐방로 등 탐방 인프라 구축, 명품 마을 조성 등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자연 중심, 지역 협력, 가치 창출, 직원 화합의 핵심 가치 도출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해양시대를 열어간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바다, 섬, 사람을 연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해양 공원 선도 사무소’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개 전략 방향과 목표별 12개 전략 과제를 선정하였다. 해양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연안 자연 자원 조사 강화, 핵심 생태 지역 복원, 환경 보호 체계 구축, 해양공원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탐방 서비스 명품화, 공원 안내 체계 강화, 안전 관리 강화, 지역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통 채널 다각화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관 기관 소통 강화, 고품격 탐방 인프라 구축, 해양 공원 레인지어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공공성 강화, 조직 전문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등도 포함됐다. 해양 생태계 보전과 고품격 탐방 인프라 구축으로 탐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소통 강화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압력 조사를 위해 무인기(드론), 수중글라이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GIS 기반 도서 정보를 구축하고 태풍이나 산불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주민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 방송 및 자동 통제 시스템, 무인계도 시스템(CCTV), 해안 지역 역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수 경보 시설 구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원시설 설치 시 사회적 약자들

배려하는 BF(Barrier Free) 인증 확대와 지역주민 관광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주민 가이드제 운영, 명품 마을 연계 생태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와 도서별 해양 생태 탐방로 지정·운영을 통해 탐방객 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립공원 시민대학 졸업생들이 지역 사회 환경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원 활동가 및 명예 레인지 운영을 통해 환경 보호 인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의 ‘2020~2024 중장기 경영 목표’의 핵심은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해양공원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속 가능 경영을 이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생태 복원, 탐방 서비스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미래의 해양 공원 시대를 열어가는 개척자이자 주민과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無 等 鼓

종교의 사유화

신사참배 거절과 모진 박해, 한센병 환자를 위한 헌신, 공산당에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원수를 양아들로 입양,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1902~1950) 목사는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 준 신앙인이었다. 여수 애양원 기념관에 는 ‘일만 원’이라는 액수와 함께 ‘귀한 아들을 그것도 돌씨이나 순교자로 신하로 나남게 감사하다’는 글귀가 적힌 헌급 봉투가 있다. 당시 손 목사의 사례금이 50원가량이었다 하니, 헌급에 담긴 그 거룩한 의미와 가치를 어찌

최근 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교단은 서 울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수습안을 의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등록 교인 10만 명에 연 예산만 1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의 ‘부자세습’(父子世襲)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이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2월 정년퇴임하자 2017년 3월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담임목사가 은퇴 후 2년이 지나 청빙했기에 세습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지만,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수습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공의롭지도 않다. 농촌이나 오지 등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세습이라면 환영받을 만하겠지만,

종교는 어느 분아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집(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2000년 전 시간을 초월해, 자본화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경고다. 답은 간단하다. 손양원 목사처럼 차원 높은 사랑을 물려줄 것인가, 교묘한 방법으로 기득권과 지위와 돈을 대물림하게 할 것인가./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3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